



업계에서 듣는다.

서울우유협동조합
지도부 박 홍 서

수입개방 압력의 주역인 우루과이 라운드 (Uruguay Round)가 1986년 9월 시작된 이래 작년까지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우루과이 라운드”의 “우”자 조차 아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았을 것이다. 이 협상의 종료 시점이 채1년도 남지 않은 금년 초 부터 농업부문에 서 우루과이 라운드(이하 UR) 협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여 지적소유권, 서비스분야 등과 함께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야단법석인 것을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일을 하는 한국인의 성격이 잘 나타나는 “우리식의 UR 대처 방안”인것 같다. 농산물 협상에 있어서는 이 협상이 종료되면 반만년간 우리조상들이 면면히 이어온 농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된데에도 정부의 책임이 크다. 농산물 교역의 문제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내로 끌어들여 졌을때 (UR 의제에 포함되었을때)는 협상의 결론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정부측에서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농업 보호의지를 확고히

하고 협상의 진행 내용을 그때그때 홍보하는 등 그 대응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왔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 세계의 바늘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우리 모두는 수입개방 압력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UR 농산물 협상의 진행 상황

개방압력의 실체를 알기 위해 먼저 농업부문에 있어 UR 협상의 진행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업부문의 협상은 UR이 개시된이래 20회 이상 진행되었으나 별 진전이 없자 지난 7월 농산물 협상 그룹의 드쥬의장이 그동안의 논의를 토대로 만든 협상초안을 내놓았고 이를 G~7정상회담등 여러 국제회의에서 “협상의 기초” 또는 “협상의 촉진수단”으로 할 것을 천명하였다. 드쥬의장 초안 내용은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 확대와 수출입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치들이 보다 강화되고 효율화된 GATT 규범 및 원칙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첫째, 수입장벽 완화를

통한 시장접근의 개선, 둘째, 농산물교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직·간접 보조금 및 기타 조치의 점진적 완화, 셋째, 농산물 식품위생 규제가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등이다.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미국은 농산물 무역에 관한 수출보조금은 5년 내에 완전 철폐하고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보조금 등 모든 지원 및 보조를 10년 내에, 또는 모든 수입장벽도 10년 내에 완전히 철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EC는 수출보조금의 동결은 우선 시행 가능하나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만 점진적으로 감축하자고 버티고 있다.

일본도 수출보조금은 현수준에서 동결한 후 합의기간 내에 철폐해도 좋으나 국내 보조금은 각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무역 왜곡적인 것만 줄여나가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 협상 전망

요컨대 각국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농업에 대한 국내보조금 지급과 농산물 수입허가제나 수입쿼터제와 같은 수입장벽을 철폐하자는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이다. 미국은 이를 서둘러 빨리 개방하자는 것이고 EC, 일본은 점진적인 철폐와 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은 EC 등의 각종 농업지원제도를 인정하고 EC는 미국의 관세화(수입개방)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선에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적으로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업 무역 체계의 확립”이라는 그럴듯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UR 농산물 협상은 알고보면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통상 압력국의 “농산물 제값 받고 더 많이 팔기”인 것이다.

수출보조금 및 농업보조금의 감축은 결국

현재 보다 국제시장에서 농산물 가격이 상승될 것이고, 수입장벽의 완화 및 농산물 위생 국제의 완화는 많은량의 농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현재의 재정적자 1,000억불을 1992년까지 제로(0)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주요 쟁점으로 등장한 것이 농산물에 대한 국내보조, 수출보조금을 줄이는 일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낙농을 서둘러 포기했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보조금이 붙은 값싼 유제품을 수입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값비싼 유제품(국내보조, 수출보조의 완전 감축 이후)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중국에 가서는 영원히 농산물(식품)을 수입해야 하는 식량 식민지가 될 우려가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행정부는 대외적으로 UR 협상에서 수입개방의 기치를 드높이고 있지만 대내적으로 국회에서 5년간(1991~1995) 550억불이 투입되는 농업보조를 강화하는 '90농업법('90 Farm Bill)이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95농업법(1996~2000년시행)도 모든 보조정책이 강화되면 되었지 더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UR 협상에서 국내보조를 10년내에 감축하자는 미국의 주장은 그들의 국내농업법 시행기간(10년간, 1991~1995, 1996~2000년)과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10년내에 세계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미국의 농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 농업구조 조정을 통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완전 수입개방이 되는 2001년 이후에는 세계농산물 시장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 수입개방 압력의 이면이다.

4. 왜 낙농을 지켜야 하는가?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농산물(식량)은 교

역 대상이 될 성질의 물품이 아니다. 특히 낙농(유제품)은 우리가 자급해야 할 “선진조국”의 기초식량인 것이다.

첫째로 유제품은 국민의 기초식량 공급원으로 식량안보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구미 선진제국의 우유소비량은 1인당 연간 200~500kg(원유환산량 기준)이며 이웃 일본만 해도 70kg 수준이다. 3kg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우유소비량은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2000년에는 약63kg으로 현재보다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유제품은 현재의 학교급식 세대의 성장과 함께 주식으로써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이다.

둘째로 낙농은 농업 중 생산성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농업구조 조정시 계속 육성해야 할 성장산업이다. 1965년 연간 우유생산량은 8천8백톤에 불과 했으나 1989년에는 176만2천 톤으로 200배가 넘는 성장을 했으며 일반 농가의 소득보다 낙농가의 소득이 25%이상 높다.

셋째로 낙농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지력을 증진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다. 한계담과 휴경지에 풀사료를 생산하고, 이 풀사료를 이용하여 우유와 쇠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낙농이다. 금년들어 국내 쇠고기 공급원 중 젓소고

기의 비율이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이 65%수준인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낙농이 쇠고기의 주요공급원이 될 전망이다. 낙농 및 낙농관련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은 연간('89년 기준) 3조3천억원 정도로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대단하다.

네째로 낙농은 선진국형 농업이며 수출형이 아닌 자급형 산업인 것이다. 세계적으로 볼때 농업 특히 낙농의 선진국은 경제선진국이며 GATT 내에 낙농품특별이사회가 있고 그 밑에 분유, 버터, 치즈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선진국이 중요시하는 산업이 낙농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중요시 하는 낙농산업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다른 품목보다 높은 생산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UR 협상이 수입개방 쪽으로 협상이 타결된다 하더라도 낙농(유제품)에 대하여는 낙농선진국들이 생산자 보조금 상당량(PSE)을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유제품이 이들 선진국에 있어서는 기초식량이며, 낙농에 대해 비교우위에 있는 뉴질랜드를 제외한 주요낙농선진국들은 낙농을 수출형이 아닌 주요 자급형 농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우유 지급을 위한

〈표1〉 선진제국의 농산물 생산자 보조금 상당량 (PSE)값(%)

년도 구별	품목	우 유		쇠고기및송아지고기		쌀		신작물 평균	
		'79-'81	'84-'86	'79-'81	'84-'86	'79-'81	'84-'86	'79-'81	'84-'86
미	국	55.2	66.3	8.8	9.4	6.8	61.0	15.7	28.2
캐	나	73.7	96.7	10.8	15.6	-	-	23.6	39.2
E	C	66.7	55.8	41.9	53.0	14.6	68.0	37.1	40.0
호	주	33.4	51.8	7.8	11.1	15.9	24.7	9.2	14.5
뉴	질	20.0	13.6	12.7	11.2	-	-	18.1	22.8
오	스	65.6	73.4	36.8	51.0	-	-	36.3	35.3
일	본	78.8	81.8	53.4	55.4	70.8	85.9	57.3	68.9

자료 : OECD 1987

국내 낙농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국내 보조 및 각종 지원을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낙농에 대한 PSE를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한다면 이들 낙농선진국의 낙농가들은 소득보장이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낙농을 아무도 하지 않게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유제품이 주요식량으로 되어 있는 이들 국가에서 사회, 정치, 안보 문제로 까지 확대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 낙농산업도 선진낙농국이 생산자 보조를 계속 하는 한 정부의 보호의지만 있다면 가장 희망이 있는 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5. 수입개방에 대한 우리의 자세 (대응 방안)

우선 정부의 자세가 문제이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UR 농산물 협상에서 한·미 무역불균형이라는 아킬레스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소비자세를 계속 견지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유제품을 포함한 수입잔존 품목은 우리나라 농업의 존폐가 걸린 국가의 근본이 되는 농산물이 대부분이다. 최대 통상압력국인 미국도 많은 웨이버품목(Waivers, 수입개방의무면제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고 우리의 공산품에 대해서도 덤핑제소 등 미국이 자주 규제하고 있으므로 언제나 우리가 수세적 입장에 설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정부는 현재 수입제한 유제품에 대해 최종 보호품목으로 지정하여 국민기초식량의 차원에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의 논리로 수입개방을 막아야 한다. 또한 대대적으로는 낙농에 대한 보조가 아닌 투자를 함으로서 “21세기 선진조국”의 확실한 국민기초식량을 생산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부가 낙농생산구조 조정 및 낙농지대조성,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서 생산성 향상은 물론 대외 경쟁력을 제고 시킬 수 있

다. 낙농진흥법의 합리적인 개정,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의 부가세 면제, 농업관련 인허가 및 검사업무의 농림수산부로서의 일원화, 유제품 및 유사유제품의 수입을 효율적으로 규제, 감시하기 위한 국제통일상품분류(HS)의 조정등 법규 및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국회 또한 당리당략을 떠나 개원을 서두르고 UR협상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과 대응을 국회 동의 후 시행할 수 있는 입법결위를 해야한다.

유업체에서는 우유에 대한 공동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제품의 개발과 세계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원가절감은 물론이고 유통구조 개선으로 보다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유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낙농가들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기술을 적극 도입, 실시하고 세계에서 최고 양질의 우유를 생산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낙농을 생업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이시점에서 유제품 수입개방압력의 확실한 대응방안은 정부의 확고한 낙농보호의지의 대외적(UR협상)인 실현이다. 이와 함께 유업체, 생산자단체, 낙농가가 다함께 맡은바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의 낙농은 한반도에서 영원히 존속된 것이며 그 어느때보다 희망을 가질수 있으므로 이제 낙농산업에 종사하는 낙농인 모두가 노력을 배가 할 때이다.